

## 장성군의회 의장 부인 '알짜사업' 행하기...결탁의혹

[편집자註]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부활되면서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28년째를 맞고 있으나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본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지자체로부터 특혜성 의혹을 받을만한 거래를 하면서 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일꾼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의원 가운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방자치의 주체로 한 장구성 감독의 영화 '이장과 군수' 보다 더 코믹한 '의장과 군수'의 실태를 시리츠로 엮는다.

5억 용자 북일면 농지에 정부미 보관창고 건립...매달 668만원 수익 '짹짹' 수익로 도급계약 체결·사실상 6년마다 자동갱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

### ③ 의장家 정부미 보관창고 사업 참여 배경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이 배우자 명의로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진 정부미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이같은 사업이 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나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익계약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창고도 수익원의 정부 용자금에 받아 건립한 것으로 확인돼 집행부와 의회간 결탁의혹마저 사고 있다.

4일 장성군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매년 농가에서 양곡을 매입한 뒤, 농협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양곡창고에 보관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양곡보관료는 저온시설을 갖춘 창고인 경우 t당 하루 185.7원로

통상 660㎡(200평) 규모인 창고 한 곳에 1천200t을 보관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보관료는 668만5천200원이며, 연간 8천133만6천600원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미를 출하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상·하차료와 이송료 등 일체의 부대비용 역시 모두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양곡창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반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창고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정부양곡(쌀) 보관료 등 관리비용 예산을 2017년 2천236억원에서 2018년 3천563억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500억원 가량 늘어난 4천108억원에 이른다.

특히 거액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나 입찰 대신 수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창고 붕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온창고의 경우 6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처럼 매년 수 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별다른 제약 없이 창고주에게 돌아가는 데다 보관료 역시 주기적으로 오르면서 돈이 된다고 판단한 발빠른 업자들은 창고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발주하는 창고시설 현대화사업을 따내기 위해 업자들 사이에서는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알짜배기 저온창고가 장성군에는 모두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상현 의장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차 의장의 경우 최근 배우자 정모씨 명의로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일원의 농지를 사들여 661.5㎡ 크기의 양곡창고를 건립했으며, 시설비는 정부 용자금 5억원 등으로 총당했다.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 배우자 정모씨 명의로 된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소재 양곡창고 전경. 애초 눈이었던 이 땅을 매입한 정씨는 지목을 변경해 창고를 지은 뒤, 정부양곡보관창고 계약을 맺고 매달 수 백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농협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창고시설을 갖춰놓으면 전기세며 상하차비 모두 나랏돈으로 지원돼 창고주의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또한 양곡창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탓에 사실상 월세를 받는 건물주와 똑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을 위해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작 결직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고방안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권고에 그치면서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익

추구에 급급한 경우가 많으며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에서 지역업을 하는 A씨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에나 매몰돼 있는 일부 의원들의 몰상식한 작태를 보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면서 "주민을 대표한다면 사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함라미달의 지방의원은 주민의 손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경석 기자

## 광주에 첫눈 내렸다고?...기상청 발표에 시민들 어리둥절

"올겨울 광주에 첫눈이 내렸다고요?"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3일 광주에 첫눈이 내렸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

응이다.

광주기상청은 "3일 오전 3시20분부터 1시간 가량 광주지역에 눈이 내렸다"며 "올겨울 첫눈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비가 섞인 진눈깨비라 적설량은 '0'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각 지방기상청 관측소에서 눈이 육안 관측될 경우 첫눈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북구 운암동에 위

치한 광주기상청 앞마당 관측소에 눈이 내렸어야 한다. 최고기온이나 최저기온, 강수량 등 다른 기상요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언제 첫눈이 내렸냐?"고 반문하며 기상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 박모씨(52)는 "오늘(4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기상청에서 광주에 첫눈이 내렸다고 발표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각종 기상발표가 시민들과 사이에 일정정도 괴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1일 광주 서구 풍암

동에서 40.1도가 관측됐지만 광주의 역대 최고기온은 같은해 7월27일 광주기상청 관측소에서 측정된 38.5도다.

올해 광주의 첫눈은 지난해(12월7일)보다 4일 빨랐고, 평년(1981~2010년 평균 11월25일)보다 8일 늦었다.

## 제17회 보성차밭빛축제

2019. 11. 29.(금)~2020. 1. 5.(일)

한국차문화공원일원

## 2020 보성울포해변불꽃축제

2019. 12. 31.~ 2020. 1. 1.